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4-21】

2014. 9. 5.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현황 및 영향

목 차

I.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1
II.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현황	4
III. 경제에 미치는 영향	9

작성: 선임조사역 김찬수(6255-5703)

avik@koreaexim.go.kr

조사역 김세진(6255-5708)

sejin0302@koreaexim.go.kr

확인: 수석조사역 조양현(6255-5711)

yhjo@koreaexim.go.kr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간 교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EU 등 서방은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등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서방의 제재현황 및 경제적 영향을 검토코자 함.

I.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 (7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발생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17이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피격되어 탑승자 298명 전원 사망하는 사고 발생
 - 국가별 사망자는 네덜란드 193명, 말레이시아 44명, 호주 27명, 인도네시아 12명, 영국 9명 등임.
- 미국과 EU는 동 사고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A-11(일명 '부크 미사일')에 의해 일어난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
 - 러시아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세력 지원에 따라, 책임 소재를 놓고 미국 및 EU의 대 러시아 비판 고조

<그림 1>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상황도





- 사고 조사를 위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말레이시아 국제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친러시아 반군의 방해로 현장접근 제한
- 서방은 우크라이나 반군과 러시아 정부 간 교신내용, 러시아제 미사일 사용 등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함. 반면, 우크라이나 반군 및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오인사격으로 주장

□ (8월 2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없이 종결

-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양자 정상회담 개최
-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결함.
-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시한 평화협상 원칙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으나 푸틴 대통령은 정전 협상은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라며 정전 조건 등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밝힘.

□ (8월 27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진입 추정

- 우크라이나 반군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대규모 반격에 나선 데 이어 동남부 노보아조프스크¹⁾ 점령
- 우크라이나는 노보아조프스크와 인근 지역이 수십 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러시아 병력의 지원으로 반군에 점령됐다고 밝힘.
- NATO는 러시아군이 친러 반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친러 반군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에 불법적 군사행동 중단 경고
- 미국·EU는 러시아가 반군 앞 군사훈련, 무기, 자금 등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정사실화함. 그러나 미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러시아군의 침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징병제를 부활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1) 노보아조프스크는 러시아 국경에서 20km 떨어져 있는 아조프해 연안도시로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길목에 자리 잡은 전략요충지



<그림 2> 우크라이나군과 반군의 최근 충돌지역



□ (8월 31일) EU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러 추가제재 시사

-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을 되돌릴 수 있는 시한으로 1주일을 러시아에 준다고 밝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 철회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U는 대러 추가제재를 부과할 방침(9월 5일 발표 예상)이며, 종전 제재 수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주민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지위(statehood)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친러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독립을 처음으로 거론함.

□ (9월 3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휴전·평화촉진 노력에 합의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정상회의 이후,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촉진을 위한 휴전·평화촉진 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힘.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분쟁 주체가 아니므로 휴전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촉구
- (미국)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을 지원하는 한 정치적 합의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함.



- NATO 정상회의가 영국 웨일즈에서 9월 4~5일에 걸쳐 개최되며, 동유럽 방위 강화를 위한 NATO군 주둔문제 및 대러 신속대응군 창설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
- 서방은 푸틴 대통령의 평화합의 촉구가 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EU의 추가제재를 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계산된 행보로 판단함.

우크라이나 사태 일지

- ▲ ('13. 11. 21) 우크라이나 정부, EU와 경제협력 협정 체결 잠정중단 발표
 - 우크라이나 內 친서방 세력에 의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 ('14. 2. 20)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 충돌
- ▲ ('14. 2. 23) 우크라이나 의회,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 선언
 - 우크라이나 동남부 친러 세력 시위확산
- ▲ ('14. 3. 21)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 ▲ ('14. 4. 7)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에서 친러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 시작
- ▲ ('14. 6. 7)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 ▲ ('14. 7. 16) 미국의 분야별 제재대상 지정 등 대러 추가제재 발표
- ▲ ('14. 7. 17)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발생
 - 네덜란드인 193명 사망 등 사망자의 대부분 유럽 국적
- ▲ ('14. 7. 31) EU 대러 추가제재 발표
 - 러시아 은행·국방·에너지 부문에 걸친 포괄적 제재안 발표
- ▲ ('14. 8. 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 ▲ ('14. 9. 3) 러시아-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휴전체제 합의

II.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현황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점진적 강화

- 미국·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합병('14. 3. 21) 이후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자산동결·비자발급 중단 등 다소 소극적인 제재에 그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지원 지속에 따라 미국은 분야별 제재 대상*(SSI,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을 발표('14. 7. 16)하며, 실질적인 경제제재 조치에 돌입함.
- VEB(러 대외경제개발은행), Gazprombank(러 3위 은행), Novatek(러 가스 회사), Rosneft(러 국영 석유회사)
- * 분야별 제재대상과 관련된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 ①금융거래(상환포함), ②금융제공, ③만기일 90일 초과 부채 또는 지분투자 금지

□ (EU) EU 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러 제재수위 강화 선회

-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로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EU 정상회의(7. 29)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긴장완화 등을 위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 시작함.
- * 2011년 체결한 대 러시아 상륙함 수출계약 건을 추진 중인 프랑스, 러시아와 석유·금융산업 등의 거래가 활발한 영국, EU 국가 중 대러 교역액이 가장 큰 독일 등은 논의 초기에 다소 미온적 입장을 견지함.

<표 1> 러시아의 주요 무역상대국 및 무역규모 비교(2013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국 가 명	교 역 액				
		수출액	비 중	수입액	비 중	
1	중 국	68,332	16,642	5.7	51,690	18.0
2	독 일	55,778	20,242	7.0	35,536	12.4
3	네 델 란 드	42,679	37,226	12.8	5,453	1.9
4	우 크 라 이 나	36,897	21,846	7.5	15,051	5.2
5	이 탈 리 아	35,100	21,256	7.3	13,844	4.8
6	터 키	30,572	23,520	8.1	7,052	2.5
7	미 국	23,939	7,894	2.7	16,045	5.6
8	일 본	22,793	9,628	3.3	13,165	4.6
9	영 국	20,201	12,320	4.3	7,881	2.8
10	프 랑 스	19,724	7,782	2.7	11,942	4.2

자료: World Trade Atlas.

- EU는 긴급 외무장관회의(7. 22)를 통한 대 러시아 추가제재 합의, 정상회의(7. 25)를 통한 개인(15명)·법인(18개) 앞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러시아 주요 은행*(5개)에 대한 제재대상을 추가 발표함(7. 31).
- * Sberbank, VTB, Gazprombank, VEB 및 농업은행



- EU 이사회를 통한 포괄적 제재조치안 발표로 러시아 은행·국방·에너지 관련기업 등 경제 주요부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러 제재안을 결정함.(7.31)
- EU 정상회의(7.29) 및 이사회(7.31)를 통해 러시아의 EU 자본시장 접근 제한, 무기금수 조치, 에너지관련 장비·기술 수출통제 등의 조치 취함.(8.1 발효)

<7. 31 EU의 대러 경제제재 주요내용>

▲ EU 자본시장 접근제한(금융제재)

- EU 회원국적 개인·기업의 러시아 국영은행, 개발은행 및 관련 자회사가 발행한 만기 90일 초과 채권, 지분 및 기타 유사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금지

▲ 무기금수 조치: 대러 무기류 수출·수입 금지, 군사물자 전용가능 상품·기술에 대한 대러 수출 금지

▲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수출통제

- 에너지관련 장비·기술의 대러 수출시 EU 회원국의 사전승인 규제(심해·북극 에너지 탐사·생산, 셰일오일 프로젝트관련 제품의 수출허가조치 시행 등)

□ (미국) EU의 대러 경제제재 공조, 추가 제재 지속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대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EU 보다는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시행함.
 - 미국은 2014년 7월 29일 VTB, Bank of Moscow, 농업은행 및 러시아국영 조선사(USC)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및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 시행
- 미국은 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러시아 제재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우방국가의 대 러시아 제재 동참을 지속 요청함.
- * 7월 29일 미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 방한 설명회 및 8월 21일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방한 및 제재공조 협의



□ (러시아) EU·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맞대응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해 농축산물 수입중단 등으로 대응
 - 미국산 가금류²⁾, 유럽산 과일수입 중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세특혜 폐지 및 곡물수입 중단, 대러 제재에 동참한 폴란드에 대해 채소과일 수입³⁾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러시아는 2014년 8월 7일 식품수입 중단 조치를 확대하여 미국, EU,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1년간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채소, 생선, 치즈, 우유, 유제품 등
- 또한, 러시아 정부는 KPMG, Deloitte, Mckinsey 등의 서방 회계법인 및 컨설팅 기업의 러시아 내 영업금지 등을 계획하고 있음.
- 러시아는 미국, EU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7월 15일 BRICs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중국 및 브라질 정상 회담을 통해 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계강화에 나선 바 있으며,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창설 등으로 미국·EU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됨.

□ 미국·EU의 추가제재 수위강화 예상

- EU는 9월 초(9월 5일 예상) 대러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제재수위는 기존 포괄적 제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추가제재 방안으로 ① 러시아 정부 발행 국채 거래금지, ② 러시아 심해 및 극지 탐사와 셰일오일 개발에 대한 유럽업체 참여금지, ③ 민간·군사 분야 전용가능한 기술 수출금지 대상 확대 등이 예상된다.
 - 러시아 국영은행에 부과된 유럽 내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금지 조치가 방산업체 및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Rosneft와 Gazprom 자회사인 Gazpromneft 등이 추가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2) 러시아는 2013년 미국에서 3억 900만 달러 규모 가금류 수입 등 멕시코에 이어 미국산 가금류 2위 수입국

3) 폴란드는 사과 생산량의 75%를 러시아에 수출해 옴.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이전 서방의 대러 제재 현황

1. EU의 대러 제재조치

- ('14. 3. 17) 1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Aleksander Bitko(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 Dmitry Rogozin(러시아 부총리) 등 정치인·군부인사 21명 대상(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조치)
- ('14. 4. 29) 2차 특별제재대상 발표
 - Dmitry Kozak(러시아 부총리) 등 정치인·군부인사 15명 제재대상 추가
- ('14. 5. 12) 3차 특별제재대상 발표
 - Vladimir Shamanov(러시아 공수부대장) 등 개인 13명, 기업 2개 제재대상 추가

2. 미국의 대러 제재조치

- ('14. 3. 17) 1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Sergei Aksenov(크림공화국 총리), Viktor Yanukovich(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한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단 조치
 - 우크라이나 정치안정 위협 및 크림반도 합병 책임
- ('14. 3. 20) 2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특별제재대상에 Viktor Ozerov(러시아 국방안보위원장) 등 정부인사 16명, 푸틴의 측근인사 4명 포함 개인 20명, 러시아 Rossiya bank 1개 추가
 - Rossiya bank는 제재대상에 포함된 Yuri Kovalchuk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 ('14. 4. 28) 3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Igor Sechin(로즈네프트 CEO) 등 측근인사 2명 포함 정부인사 7명, 기업·은행 17개 제재대상 추가
- ('14. 6. 20) 4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 7명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 Igor Girkin(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등
- ('14. 7. 16) 5차 특별제재대상 명단 발표
 - 특별제재대상(SDN): 개인 5명, 주·기업 11개
 - Aleksander Borodai(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총리) 등 정부관료 5명 등
 - 분야별 제재대상(SSI): 4개 기업·은행 및 8개 무기생산 업체
 - Novatek, Rosneft, VEB, Gazprombank



Ⅲ.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전염효과 우려

- 미국·EU와 러시아의 갈등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EU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세계경제도 침체가 우려됨.
-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IMF는 경고(7.29)
- 교역위축, 국제유가 상승, 석유·에너지 관련 기업의 대 러시아 사업추진 위축,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 대 러시아 제재 강화로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 예상

-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지속·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됨.
-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7월 말 지정학적 긴장고조, 물가상승 우려 등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5%에서 8.0%로 인상함.
- 기준금리: 5.5%(2월) → 7%(3월) → 7.5%(4월) → 8.0%(7월)
- 국제신인도 악화 등으로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의 자금조달⁴⁾ 곤란 및 조달비용 상승, 에너지 분야 등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등 예상
- 러시아 국영은행과 기업은 유럽금융시장의 대체시장으로서 중국과 싱가포르 및 홍콩 등 아시아 금융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나 유럽금융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분야 관련 장비의 2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북극해 개발에 사용되는 장비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경제상황 악화 전망 등으로 OECD는 러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4) 2013년 기준 러시아는 전체 158억 유로의 자금수요 중 50%를 유럽에서 공급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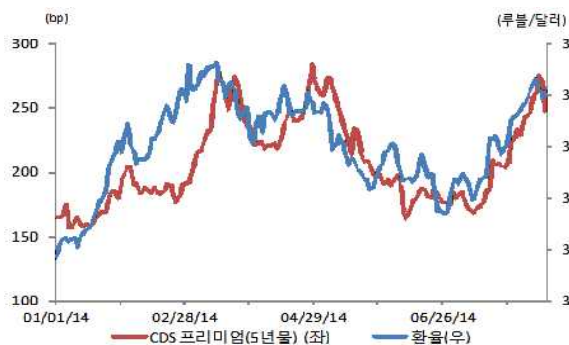


<표 2>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 현황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Negative (2014. 8)	C1/Stable (2013. 11)
OECD	3등급 (2014. 1)	3등급 (2013. 1)
S&P	BBB-/Negative (2014. 4)	BBB/Stable (2013. 12)
Moody's	Baa1/Negative (2014. 6)	Baa1/Stable (2014. 3)
Fitch	BBB/Negative (2014. 3)	BBB/Stable (2014. 1)

- 서방의 추가제재 등의 영향으로 9월 2일 미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가 2014년 연중 최저수준인 37.46으로 하락함.
- IMF는 4월 초 금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4월 말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다시 0.2%로 하향 조정함.
- EU는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은 2014년 230억 유로(GDP의 1.5%), 2015년 750억 유로(GDP의 4.8%) 수준으로 추정
-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향후 러시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그림 3> 주요 금융지표 변동추이



자료: Bloomberg.

<표 3>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러시아		
	'12	'13	'14 ^f
경제 성장률	3.4	1.3	0.2
인플레이션	5.1	6.8	5.8
실업률	5.5	5.5	6.2
재정수지/GDP	-0.2	-1.4	-0.6
경상수지/GDP	3.6	1.6	2.1

자료: IMF(2014. 7)

□ 러시아는 아시아지역 등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서방의 제재,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추진 등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 수출물량을 아시아로 돌려야 하는 상황임.



- 2014년 5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가스프롬은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 m³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한편, 로스네프트는 현재 일평균 30만 배럴 수준인 대 중국 원유 수출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스프롬이 독점하던 가스수출에 대한 자유화를 통해 중국 등 아시아로 수출 확대 추진
 - 러시아는 2013년 가스프롬의 가스수출 독점권을 폐지하여 LNG 수출을 자유화한 이후 2014년 PNG⁵⁾ 수출에 대해서도 자유화 추진

□ EU 경제상황도 악화 전망

-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1/3 수준으로 높고 유럽과 러시아 기업간 교역규모가 3,000억 달러⁶⁾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의 경기위축 예상
 - 독일은 가스 수요량의 3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핀란드와 발트 3국은 천연가스 수입의 10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
 - Fitch는 유럽국가들이 최소 2020년 중반까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
- 원유 및 가스 생산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에너지 수입국의 경제상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국 비중



〈표 4〉 유럽 주요국 러시아 가스 의존율
단위: %

국 가 명	'12년
핀 란 드	100
체 코	78
폴 란 드	48
독 일	35
이 탈 리 아	27
프 랑 스	13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4 자료: EU

5) Pipeline Natural Gas

6) 러시아는 EU의 제3위 교역국



- EU는 EU 자체적인 경제적 손실을 2014년 400억 유로(GDP의 0.3%), 2015년 500억 유로(GDP의 0.4%) 수준으로 추정함.
- 독일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기계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금융산업과 군수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
- 러시아의 농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EU는 2013년 기준 52.5억 유로 수준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되며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표 5>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f
경제성장률	-0.7	-0.5	1.2
인플레이션	2.5	1.3	0.9
실업률	11.4	12.1	11.9
재정수지/GDP	-2.3	-1.3	-1.2
경상수지/GDP	2.0	2.9	2.9

자료: IMF(2014. 7)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경제관계 위축 예상

- 미국·EU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 111억 달러, 수입 115억 달러, 직접투자 1.2억 달러로 집계

<표 6>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교역·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2014. 6
수출	10,305	11,097	11,149	6,054
수입	10,852	11,354	11,495	7,582
투자	100	109	122	34

자료: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 EU의 경제제재보다는 미국의 경제제재, 특히 금융제재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과거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사례 등을 감안,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직접적 제재대상(VEB, VTB, Novatek 등)과의 거래관계가 잠정중단될 상황이므로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는 상황

문의: 선임조사역 김찬수(6255-5703)
avik@koreaexim.go.kr
조사역 김세진(6255-5708)
sejin0302@koreaexim.go.kr